

문화융성과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담론 분석

Discourse Analysis of Cultural Prosperity and Local Cultural Policy

김진희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창조산업연구소

Kim jin-hee

Andong National Univ, Research Center for Creative Industry

요약

문화융성은 문화의 여러 층위와 지향들이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개인을 비롯한 사회 각 주체들의 창의와 지성의 정신 활동을 생산성 있게 지속시키는 데로 나아가는 것, 그리하여 이들 활동들을 역동적으로 융합(networking)하고 선순환 함으로써 우리의 정신과 의식이 산출해 내는 것들의 가치가 높아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신적 삶이 더욱 높은 수준으로 고양되는 상태를 말한다. 본 논문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 공포한 <지역문화진흥법>에 담긴 문화융성을 담론분석 하였다.

I. 문화융성 담론

문화융성은 항존(恒存)의 가치를 지니는 개념이다. 또한 문화융성은 특정의 맥락을 지닐 때에만 '현실의 가치'로 부화한다. 달리 말하면 문화융성은 정치적,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면모를 동시에 가진다. '문화'를 일으키고 높여서 백성의 정신세계를 풍요하게 하고, 그것으로 나라를 번성하게 하는 바탕 기제를 삼으려 하는 것이 문화융성이므로, 마땅히 정치가 추구하는 경지이다. 융성한 문화를 역사의 일정 시기에 구현하여 이를 그 시대가 갖는 한 특징으로 드러낸다면, 그래서 그 시대와 다른 시대를 구분하는 한 특징으로 규정될 수 있으면, 그때의 '문화융성'은 자못 역사적인 것이 된다. 그러한 문화융성은 자연스럽게 '평가의 내용'이 된다.

정치적 개념으로서의 문화융성은, 정치로써 그것을 구현해 내기를 기대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지향 지표로서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이런 경우 문화융성은 구체적 층위와 구체적 지표들로 실체화되기보다는 일종의 유토피아 개념에 가 닿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의 최상 지표를 구체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문화융성이 실체성을 적시하기에 용이하다. 한 시기의 역사가 보여주는 문화융성은 역사적 평가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시기 다른 문화적 노력들에 대한 참조의 준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문화융성과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담론을 논하는 시각과 입지도 정치적인 맥락¹⁾과 현재의 역사적 맥락

에 긴밀하게 결부되는 것임을 면할 수 없다.

유의할 점은, 문화융성을 역사주의 입장에서 설명할 때는 문화융성은 정치적 업적의 자질로 환원되기 쉽다. 여기에는 지배세력이나 엘리트 계급의 문화가 '융성의 전부'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역사학자들은 보편적으로 문화를 예술 활동과 엘리트층의 지적 산물로 간주한다. 이에 반해 최근에는 '문화는 지배와 종속의 사회적 관계가 결성되고 해체되는 영역이다'고 주장한다. 문화가 복수로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문화를 서로 다른 의미가 공존하는 영역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개념에는 엘리트 집단이 대표하는 국가문화나 지배층 문화는 물론이고 지방 문화나 피지배층의 문화도 포함된다. 문화지리학자들은 문화가 구성되고 표현되는 사회적 맥락의 범위를 과소평가하였다고 본다.

이런 관점은 현 사회가 개방적인 정보화 사회, 자유 민주 시민사회의 문화융성을 설명하는 데는 반드시 참조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런 관점을 수용하면서 '문화융성'은 문화들 간의 변이와 상호성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 가 닿아야 하는 접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문화융성의 구체적인 정치적, 역사적 기제로서 지역문화정책은 하나의 탈근대의 관점에서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들 사이의 길항을 이해하고, 그 문화들이 서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가능태 안에서 '문화융성'을 재개념화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문화의 여러 층위와 지향들이 왕성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개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 각 주체들의 창의와 지성의 정신 활동을 생산성 있게 지

1) '정치적인 맥락'은 지역문화정책이 '문화융성'이라는 특성의 국가정책에 다가갈 때, 그것의 가치나 이데올로기에 결부되는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문화정책의 실천 기제인 지역문화정책시행령은 문화융성을

위한 미래적 가치와 역할을 세계관, 조직관, 실천관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관점들 사이의 대립과 조정과 선택이 생겨나는데, 이는 정치적 맥락이 개입되는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속시키는 데로 나아가는 것, 그리하여 이들 활동들을 역동적으로 융합(networking)하고 선순환 함으로써 우리의 정신과 의식이 산출해 내는 것들의 가치가 높아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신적 삶이 더욱 높은 수준으로 고양되는 어떤 상태를 문화융성의 상태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II. 지역문화정책 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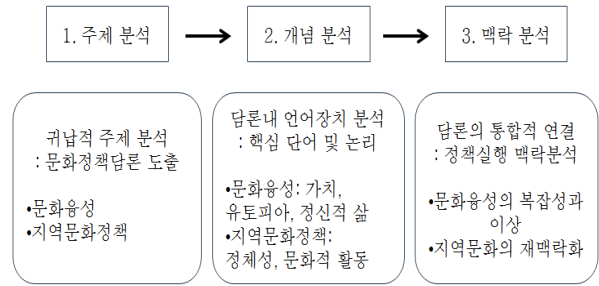
지역문화정책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이를 국가가 문서적 수준에서 법제화한 것이 상위법으로는 문화기본법, 하위법으로는 관련법들이 있으며, 최근에 제정 공포된 지역문화진흥법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은 지역문화진흥법이 지역문화정책의 실행범위를 담은 것으로 보고 논의의 대상으로 하였다. 7장 24개조로 구성된 지역문화진흥법은 앞서 언급한 문화융성의 가치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현하는 실행 법령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중앙집권에서 벗어나 지역의 고유성과 독특함을 살린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지역문화진흥법은 현재 문서적 수준에서 분석하여도, 국가의 기조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그 예로, 지역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한다는 점 등은 이미 각 지역을 일정한 틀에 두고 구분 짓기를 하고 있어, 문화를 매개로 한 지역간의 갈등과 경쟁관계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진흥법임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 문화도시 등의 정의와 범위를 다시 세분화하는 것은 각 지역을 차등화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구조적으로는 지역문화진흥법이 내걸고 있는 <문화국가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상위법인 문화기본법의 내용인데,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은 차별성이 보장되어야 할 지역문화진흥법은 결국 문화융성이라는 국가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맥락화한 것에 불과하다. 지역이 추구하는 문화적 가치를 담은 자치권과 분권의 실천은 없고, 지역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한다는 미명하에 지역의 구분짓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문화융성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평가기제) 지역문화진흥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II. 문화융성과 지역문화정책 담론

본 연구에서 다른 문화융성과 지역문화정책의 담론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 그림 1. 문화융성과 지역문화정책 담론 분석

이러한 담론을 보다 문화융성과 지역문화정책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정책의 제기가 조명될 필요가 있다. 첫째, 특정의 국가 전략으로서의 제기되는 차원이다. 국가가 강한 정신적 리더십을 가지고 제도적 치적과 재정적 지원 등으로 문화의 발흥과 융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야말로 국가전략의 면모를 지닌다. 지도층 엘리트들이 실천하고 국가의 주요 교육 체제들이 이런 정신과 가치를 문화적 실천교육으로 추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적 리더십으로는 중앙집권을 강고히 하기 위한 획일화에 무게가 있으므로, 오염되지 않은 실천의 장으로서 융성기제의 작동은 회의적이다.

둘째, 사회 일반이 합의하고 공유하는 가치로서 문화의 융성을 추구하는 차원이다. 이것이 가능해야 공동체의 가치로서의 지역문화진흥이 실현된다. 시민 사회와 언론 등의 민간 차원에서 운동을 벌이고 그것을 다시 관계 기관들이 호응하여 공공의 정책으로 호응 지원하는 수준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셋째, 개인이 자신의 삶의 주권과 문화적 결핍에 대해서 반성하고 도야하는 차원이다. 이런 개인의 경우가 결집하여 사회 문화적 힘으로 드러나거나 국가적 이슈로 지속될 때 '문화융성'에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다. 둘째와 셋째는 내적으로는 공동체적 상호성을 강하게 지닌다.

■ 참고 문헌 ■

- [1] 구문모, "문화중심 지역개발 사업의 창조생태계적 접근과 정책적 함의", 문화경제연구, pp.79-112, 2012.
- [2] 서우석·이정화·소홍삼, "문화정책 분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방안 연구", 문화경제연구, pp.107-132, 2013.
- [3] 이원재, "한국의 문화정책을 둘러싼 주요 쟁점 및 과제들", 문화정책 강좌, 2014.